

2014년도 6월 28일 시행

## 서울시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행정법총론(A책형)

해설 - 김 옥 교수(에듀윌)

1.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① 법률우위원칙 ② 의회유보원칙 ③ 침해유보원칙
- ④ 과잉금지원칙 ⑤ 신뢰보호원칙

2.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 ② 사인의 행위만으로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와 허가제의 허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⑤ 현재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3. 행정행위의 표시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 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4. 행정청이 처분을 내린 후에 대법원이 그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 위법·무효라고 선언하였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거 법령이 위법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그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② 근거 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③ 근거 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하자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명백성은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 ⑤ 처분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다.

**5. 인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보충적 의사표시를 인가라고 한다.
- ② 인가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적법한 인가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가 된다.
- ③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에는 공법상 행위도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다.
- ④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행위가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 ⑤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신청을 전제로 한다.

**6. 판례상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은?**

-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 ② 재개발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③ 보상금결정처분과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
- ④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⑤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7.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원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를 판단한다.
- ②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재량행위에 비해 더 큰 재량의 범위가 부여된다.
- ④ 형량명령이론은 계획재량의 통제와 관련이 깊다.
- ⑤ 법이 정한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선 경우를 재량의 일탈이라 한다.

**8.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정권자를 기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법규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
- ③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개별적인 수권규범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 ④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의 법규

명령에 재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⑤ 형벌규정의 위임은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9. 행정지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④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0.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③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⑤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 ①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이 해당한다.
- ② 정보공개 청구권은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 ③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 ④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 ⑤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을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 ②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성이 있는 의무이어야 한다.
- ③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야 한다.
- ④ 의무의 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⑤ 의무를 명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13. 행정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사는 조사를 통해 법령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 ② 집행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 ③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④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15.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과실개념의 주관화(主觀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 포함된다.
- ⑤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인 경우이어야 한다.

**16. 손실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이 헌법적 근거가 된다.
-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한다.
- ③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상은 상당한 보상이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④ 최근에는 재산권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 ⑤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17.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 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② 해당 행정청이 위치한 구(區)행정심판위원회

-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④ 서울특별시장
- ⑤ 행정심판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8.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 ②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③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 ④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의 적용이 있다.
- ⑤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19.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 ② 1심 법원의 판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 ③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 ④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
- ⑤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간의 소의 변경은 물론,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20.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 ①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 ③ 1일 50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안의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④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은 기존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우
- ⑤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업자가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투는 경우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②

[해설] 헌법재판소가 말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회유보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2. [정답] ③

[해설] 대법원은 양지마을 전입신고거부사건에서 ‘전입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예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3. [정답] ③

[해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판 2002.7.26, 2000다25002).

### 4. [정답] ④

[해설] 행정청이 처분을 내린 후에 대법원이 그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 위법·무효라고 선언하였다면 해당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 되는데 그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하자에 해당한다.

### 5. [정답] ②

[해설]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주는 보충행위일 뿐 인가가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기본행위의 하자가 인가에 의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6. [정답] ③

[해설] 판례는 ③에 대해서만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 7. [정답] ①

[해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 8. [정답] ④

[해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의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포괄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9. [정답] ④

[해설] 행정지도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다.

### 10. [정답] ⑤

[해설] 행정절차법은 제23조에서 이유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지문의 ①②③④를 규정하고 있다. ⑤는 이유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11. [정답] ⑤

[해설] ① 틀림.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은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예 각급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② 틀림. 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③ 틀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곧 인정되지만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대통령령에 유보되어 있다. ④ 틀림.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한다.

12. [정답] ⑤

[해설] '의무를 명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은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다. 즉, 의무를 명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정대집행은 가능하다.

13. [정답] ①

[해설]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4항).

14. [정답] ⑤

[해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에 의한다. 즉,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과태료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15.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 해석을 그르쳤다면 원칙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 ③ 틀림. 과실의 주관화가 아니라 객관화가 오늘날의 경향이다. ④ 틀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사경제적 작용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된다. 즉,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된다. ⑤ 틀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관·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형설(외관설)] . 따라서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한다.

16. [정답] ③

[해설] 손실보상의 범위에 대해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의 견해대립이 있는데 통설·판례는 완전보상설을 취한다. 완전보상설은 원칙적으로 피침해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전부보상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17. [정답] ①

[해설]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관할기관은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다.

18. [정답] ②

[해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위(거부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즉,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19. [정답] ②

[해설] 소 변경은 1심 법원의 판결 시까지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2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20. [정답] ⑤

[해설] ①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지만 ②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 업자는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